22년 2차 경찰학 해설 에듀윌 정진천 경찰학

● 총평

힘든 여건 속에서도 경찰의 꿈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경찰 시험 준비에 쏟아부은 우리 예비경찰관들에게 다시 있어선 안 될 사태였습니다. 경찰학에 있어 출제되어야 할 내용이 출제된 것은 맞지만 전체 구성(난이도)면에서는 역대급 실패작이었습니다. 우리 경찰(순경) 시험은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 수 있는 시험이었어야 합니다. 아니 풀지는 못하더라도 다 읽어 볼 수는 있게 출제해야 합니다. 지문을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어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검증하려는 시험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읽지도 못하고 찍도록 해버리면 상대평가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합격의 당락을 운에 맡기는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시험이었습니다.

수험생분들은 쉽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보완할 점은 보완하여 다시 달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가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는지가 내년 합격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경찰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절실함과 열정이 이번 사태가 주는 무기력감보다 더 크기에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합격을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출제분석

경찰학의 기초이론 17.5% (-12.5%)	경찰개념	01	
	경찰의 임무	02	
	경찰의 기본이념	05	
	경찰윤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06	
	경찰윤리: 경찰의 부정부패	07	
	경찰윤리: 경찰 전문직업화의 윤리적 문제	08	
	범죄학이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09	
	제도론 2.5% (-2.5%)	한국 경찰의 역사	11
		경찰 행정법의 기초: 법치행정의 원칙	27
경찰 행정법 50% (+15%)	경찰 행정법의 기초: 법률유보의 원칙	10	
	경찰 행정법의 기초: 경찰 행정법의 일반원칙	12	
	조직법: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	26	
	조직법: 국가경찰위원회 vs 시·도자치경찰위원회	03	
	조직법: 권한의 위임·대리	28	
	경찰공무원법: 신분변동	31	
	경찰공무원법: 징계	13	
	경찰공무원법: 승진	14	
	경찰공무원법: 소청심사	15	
	작용법: 재량	04	
	작용법: 범죄의 예방과 제지	16	
	작용법: 정보활동	22	
	작용법: 처분	17	
	작용법: 경찰허가	19	
	작용법: 경찰조사	18	
	작용법: 즉시강제	20	
	작용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구제법: 국가배상	25	
	구제법: 사정재결	24	
경찰행정학 10% (-5%)	사기관리(동기부여)	28	
	개인정보보호법	21	
	근무성적평정	30	
	경찰통제	32	
분야별 경찰활동 20% (+5%)	생활안전: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규칙	33	
	생활안전: 아동·청소년 성보호	35	
	생활안전: 실종아동·가출인	36	
	수사: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4	
	수사: 성폭력 피해자 보호	37	
	경비: 군중정리의 원칙	38	
	교통: 종합문제	40	
	정보: 집회 및 시위	39	

● 기출해설

1.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 ② 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 ③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 ④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죄처벌법전 (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해설

- ① 옳음.
- ② 옳음. 독일을 무대로 하여 로마 가톨릭교회와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벌어진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을 맺음하고 근대적 국민국가의 길을 연 베스트팔렌 조약(1648)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 ③ 옳음. **제2차 탈경찰화(비경찰화)에 대한 설명** ▶ 독일의 경찰개념에서 복리증진이 탈락되어 가는 과정을 제1차 탈경찰화라고 하며 2차대전 이후 경찰행정청과 일반질서행정청의 구분을 전제로 영국과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바이에른 등에서 경찰행정과 일반질서행정청의 구분을 전제로 양자가 모두 위험방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관점에서 경찰권한의 축소를 가져오게 된 과정을 2차 탈경찰화라고 한다. 제3차탈경찰화는 1990년대부터 국가가 경찰권을 독점하던 것이 깨지고 과거 경찰의 직무로 간주되어 오던 영역의 일부가 사인에 의해 행사되게 되어가는 과정, 즉 이른바 경찰의 민영화를 말한다.
- ④ 틀림.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이 제정되었다.

▶ 1794년 제정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2장 제17절 제10조에 “공공의 평온·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개개의 구성원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기관이 경찰이다.”라고 규정했는데 이러한 경찰의 개념은 흄볼트, 칸트 등이 강하게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리경찰적 개념의 부활을 가져온 여러 법(1795년과 1797년의 프로이센 복무규정, 1802년의 프로이센 행정명령)들에 의하여 법적 효력이 명시적으로 폐지**되어버렸다. **1850년의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을 제정할 당시의 정부에서도 경찰의 영역이 무제한적이며 경찰의 영역이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유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법치국가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이츠베르크판결이다. **판결 이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2장 제17절 제10조에 근거한 경찰법의 체계를 완성시키고자 노력한 결과로** “경찰행정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 및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정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합적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한 **1931년의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가 입법이 된 것**이다.

정답 ④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 단속 등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된다.
- ②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 설치 관리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 ③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관한 범죄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 ④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해설

- ① 옳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① 제2호)
- ② 옳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① 제2호 '나'목)
- ③ 틀림.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에 관한 범죄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 ④ 옳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②)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사무

경찰의 사무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사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②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 2명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설

- ① 틀림.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①)
- ② 옳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①, 제23조①)
- ③ 틀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①)
- ④ 틀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②)

정답 ②

▣ 다른 점 비교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 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 으로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 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임시회의 소집요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 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 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4. 경찰재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 ② 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결정재량이라 한다.
- ③ 재량의 일탈 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④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을 말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해설

- ① 옳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1차적 구별기준은 법률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하여야 한다, ~해서는 아니 된다.’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기속행위 이며 ‘~할 수 있다.’ 등의 형식을 취하면 재량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 ①의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93조①의 내용으로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경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속행위이다. 기속행위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 ② 옳음. 행정청이 법규가 허용한 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재량을 결정재량이라고 하고 법규가 허용한 조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을 선택재량이라고 한다.
- ③ 옳음. 재량행사에 있어 합리성을 잃은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④ 틀림.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외적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④

5. 다음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기 2>
㉠ 인권존중주의 ㉡ 민주주의 ㉢ 법치주의 ㉣ 정치적 중립주의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가)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민주주의**
- (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인권존중주의**
- (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정치적중립주의**

정답 ③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이 모교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아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5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금액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 개념에 포함된다.

해설

- ① 틀림.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①)
- ② 틀림.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①)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②)
- ③ 틀림.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⑤)
- ④ 옳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정답 ④

7.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가설)에 관한 설명이다. 주장한 학자와 이론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신입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에게 물들게 된다는 것으로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 시카고 경찰의 부패 원인 중 하나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라는 주장이 거론된 것처럼 시민사회가 경찰관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용인할 때 경찰관이 부패 행위에 빠져들게 된다.

- ① ㉠ 델라트르(Delattre)-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니더호퍼(Nei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구조원인가설
- ② ㉠ 셔먼(Sherman)-구조원인가설
 ㉡ 델라트르(Delattre)-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③ ㉠ 니더호퍼(Nei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구조원인가설
 ㉡ 윌슨(Wilson)-전체사회가설
- ④ ㉠ 윌슨(Wilson)-전체사회가설
 ㉡ 펠드버그(Feldberg)-구조원인가

해설

- ㉠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신입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에게 물들게 된다는 것으로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 **니더호퍼(Nei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구조원인가설**
- ㉡ 시카고 경찰의 부패 원인 중 하나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라는 주장이 거론된 것처럼 시민사회가 경찰관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용인할 때 경찰관이 부패 행위에 빠져들게 된다. → **윌슨(Wilson)-전체사회가설**

정답 ③

8.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경찰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O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 ㅁ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폭행하자 교통, 정보, 생활 안전 등 다른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경비분야만 생각하고 검거 결정을 하였다.

- ① 부권주의 ② 소외 ③ 차별 ④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

해설

▣ 전문직업화의 윤리적 문제점

부권주의 (paternalism)	① 부권주의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의미. ② 전문직업적 부권주의는 공무원이 전문지식을 배경으로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강제력 행사의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시각. ③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 (exploitation)	전문직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을 갖게 되는데 그 힘을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함.
소 외 (alienation)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 을 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차 별 (discrimination)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의 교육과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차단)할 우려가 있어 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정답 ②

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의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은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자연적 감시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를 활동의 활성화(활용성의 증대)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놀이터 공원의 설치,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통행로의 설계 등이 있다.
-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자연적 접근통제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방법창, 출입구의 최소화 등이 있다.
-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유지관리라고 하며, 이에 대한 종류로는 청결유지, 파손의 즉시보수, 조명의 관리 등이 있다.

- ① ㉠(O) ㉡(X) ㉢(X) ㉣(O) ② ㉠(O) ㉡(O) ㉢(X) ㉣(O) ③ ㉠(X) ㉡(X) ㉢(O) ㉣(O) ④ ㉠(O) ㉡(O) ㉢(O) ㉣(X)

해설

- ㉠ 옳음.
 - ㉡ 틀림. **통행로의 설계는 자연적 접근통제**의 종류에 해당한다.
 - ㉢ 틀림.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영역성의 강화**라고 한다. 종류로는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등이 있다. ➡ 방법창, 출입구의 최소화는 자연적 접근통제의 종류에 해당한다.
 - ㉣ 옳음.
- **환경범죄이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는 물리적환경설계·주민참여·경찰활동 등의 요소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접합시켜 주택 및 도시설계를 통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줄이고자하는 범죄예방전략이다.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 조명·조경·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
자연적 접근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차단기, 방법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 출입구의 최소화
영역성의 강화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 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 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활동성의 활성화 (활용성의 증대)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 하는 원리.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유지관리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 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말함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10.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
- ㉡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홍보
-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 ㉣ 공무원에 대해 특정종교를 금지하는 훈령
-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
- ㉥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금지

- ① ㉠㉡㉢ ② ㉠㉢㉤ ③ ㉠㉣㉤ ④ ㉡㉢㉤

해설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의 일정한 영역(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 ㉠㉡㉢이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한 것이다. ㉣㉤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정답 ①

11.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시대 중앙에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위 등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중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규탄하고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 ② 이준규 서장은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명령이 내려오자 480명의 예비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라는 연설 후 전원 방면하였다.
- ③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 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투경찰 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 추가되었고 소방업무가 경찰의 업무범위에서 배제되는 등 경찰활동의 영역에 변화가 있었다.
- ④ 구 경찰법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해설

- ① 옳음.
- ② 틀림. **안중삼 서장**에 대한 내용이다.
- ③ 옳음.
- ④ 옳음.

▣ 보도연맹사건과 안중삼 서장

보도연맹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949년 4월 좌익사범들을 전향시키기 위한 유화책으로 사상 전향자들로 ‘국민보도연맹’(보도연맹은 신분 보장을 약속하고 좌익들을 전향시켜 ‘요시찰인’으로 관리하는 것임)이라는 관변단체를 조직하였다, ②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와 군·경은 보도연맹원들을 북한에 동조할 위험이 있는 인물들로 보고 구금하였고, 즉결처분 방식으로 수만 명(추정)을 사살하였다.
안중삼 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레경찰서 안중삼 서장은 여순사건 이후 구레군에 국민훈련원 구레분원을 설치하여 보도연맹원들에게 복권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② 1950년 7월24일 전쟁발발로 예비검속 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 명령이 내려오자 480명의 예비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라고 연설한 후 전원을 방면하여 구명하였다. ③ 이러한 의기를 기려 2012년 7월 구레경찰서 서정에 안중삼 서장의 동상이 제막되었다.

정답 ②

1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③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비위의 성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④ 적법 및 위법을 불문하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해설

- ① 옳음.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98두4061)
- ② 옳음.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그 동안 그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96다49650)
- ③ 옳음.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9두2611)
- ④ 틀림.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라도,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두13132)

정답 ④

13.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경감 甲과 동일한 지구대 소속 순경 乙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甲의 감독상 과실책임만으로 관련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분리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은 OO경찰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② 경찰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 ③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OO경찰서 소속 경사 丙에 대한 정직처분은 소속기관장인 OO경찰서장이 행하지만,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이다.
- ④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정 丁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그 표창이 丁에게 수여된 표창이 아니라 丁이 속한 OO경찰서에 수여된 단체표창이라면 감경할 수 없다.

해설

- ① 틀림.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므로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경감 甲의 징계위원회 관할은 원칙적으로 OO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이다. 그러나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해양경찰서 등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및 정비창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로 인해 해당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찰공무원(경감 甲을 의미)의 징계 등 사건은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결론적으로 **경감 甲은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② 틀림. 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86누459)
- ③ 틀림.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경사 丙에 대한 정직처분은 임용권자가 하도록 되어있다. 丙에 대한 임용권은 경찰청장에게 위임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므로 경찰공무원법 제34조에 따라 피고 또한 시·도 경찰청장이 된다.
- ④ 옳음.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①) ➡ **[관련사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함은 관련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고, 징계대상자가 위와 같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징계양정에 참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징계대상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두13245)

정답 ④

14.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OO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甲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 甲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 甲이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임용권자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乙의 위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 ③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 丙의 위 근무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 ④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50만 원의 향응을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감 丁이 그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그 외 일체의 포상을 받은 사실 없음)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승진임용될 수 있다.

해설

- ① 틀림. 구 경찰공무원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항,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와 함께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 그 등재순위에 따라 승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7누7325)
- ② 옳음. **휴** 직 기간, **직** 위해제 기간, **징** 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② 제1호'라')
- ③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 ④ 옳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금, 공)과 소극행정, 을주운전(을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희롱,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③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1. 훈장 2. 포장 3. 모범공무원 포상 4.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5. 제안이 채택·시행되어 받은 포상 **→ 경찰청장표창은 단축에 해당사항 없어 감봉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 12개월에 금품향응수수료 인한 6개월을 더해 18개월이 된다.**

정답 ①

15.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OO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 甲이 법령준수 의무 위반 등 각종 비위행위로 인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권자로 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순경 甲은 소청심사를 제기하고자 한다.

-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명령결정을 내릴 경우, 그 해임의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기 전에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④ 甲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甲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없다고 전제한다)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 ① 옳음.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⑧)
- ② 틀림.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⑦)
- ③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14조②)
- ④ 옳음.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①)

정답 ②

16.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사건 당일에도 甲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집 안에서 음악을 크게 켜놓고 심한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甲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甲은 심한 욕설을 할 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甲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甲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 ② 甲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지 않고 소란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甲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로 볼 수 있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고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경찰관의 조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

해설

- ① 틀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대법원 2016도19417)
- ② 옳음.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6도19417)
- ③ 틀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도19417)
- ④ 틀림.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의 목적에 맞게 제2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제6조에서 정한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다.(대법원 2016도19417)

정답 ②

17.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도로점용허가
-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 ㉢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 ㉣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 ㉤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에 해당한다.

- ㉠ 옳음. 도로점용허가 - 특허
- ㉡ 옳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 행정처분(대법원 2013두2945)
- ㉢ 옳음.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 하명
- ㉣ 옳음.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 하명
- ㉤ 틀림.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 처분성 인정되지 않음.

정답 ④

18.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조사기본법」 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의 수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작용이다.

해설

- ① 틀림.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행정조사는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조직법상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 ② 틀림.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 ③ 틀림. 경찰의 수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 ④ 옳음.

정답 ④

19. 강학상 경찰허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들도 모두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및 급부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 ③ 강학상 허가과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④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해설

- ① 틀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의 효과는 상대적인 것으로 특정행위에 대한 부작위의무(금지)를 해제할 뿐 **다른 법률상의 의무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틀림. 허가는 **부작위의무(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다.
- ③ 틀림. 허가과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을 요한다. 다만 허가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예** 통행금지 해제
- ④ 옳음.

정답 ④

2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주택가에서 흥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 하는 것
- ㉡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 ㉢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
- ㉣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 ㉤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 ㉥ 무허가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 **즉시강제**에 해당.
- ㉡ 행정행위(철회)에 해당.
- ㉢ **즉시강제**에 해당.
- ㉣ **즉시강제**에 해당.
- ㉤ 강제집행(강제징수)
- ㉥ 강제집행(대집행)

정답 ①

21.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의 및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 한다.
- ②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 한다.
- ③ 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 낸 새로운 정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정보주체”라 한다.
- ④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해설

- ① 옳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② 옳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 ③ 틀림.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
- ④ 옳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호)

▣ 개인정보보호법(정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가명처리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처리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과학적 연구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정답 ③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상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 ㉠ 언론기관 ㉡ 종교시설 ㉢ 민간기업 ㉣ 정당의 사무소 ㉤ 시민사회 단체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모두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에 해당.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제5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1.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2. 민간기업 3. 정당의 사무소
--------------------------	---

정답 ④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 ② 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③ 행정대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 ④ 「관세법」 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해설

- ① 옳음.
- ② 틀림. 행정대집행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대집행 자체의 법적근거를 요하고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즉시강제 또한 자연법적 논거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고 엄격한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고, 개별법으로는 소방기본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등이 존재한다.
- ③ 틀림.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 ④ 틀림.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상 통고처분도 재량의 여지가 있다. ➡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관세법 제311조①) //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7조①) //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63조①)

정답 ①

24.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정재결은 인용재결의 일종이다.
- ②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 ③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 ④ 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해설

- ① 틀림. 사정재결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는 것을 말하며 기각재결의 일종이다. ➡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4조①)
- ② 옳음.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①)
- ③ 옳음.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①)
- ④ 옳음.

정답 ①

2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이의(異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 관계 국가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 할 수는 없다.
- ② 국가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 ③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은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인정되므로, 그 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한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 ④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한 여러 권한을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지만,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해설

- ① 옳음. (대법원 2019다277126)
- ② 옳음. (대법원 2008다77795)
- ③ 틀림.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다208388)
- ④ 옳음. (대법원 2013다20427)

정답 ③

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 ㉡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 아동학대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 ㉤ 교통사고 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감독
- ㉥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 틀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 **형사국장 분장사항**
- ㉡ 옳음.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 틀림. **아동학대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형사국장 분장사항**
- ㉣ 틀림.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 **경비국장 분장사항**
- ㉤ 틀림. 교통사고 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감독 ➔ **형사국장 분장사항**
- ㉥ 옳음.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정답 ③

27.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 ② ‘법률의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포함된다.
- ③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④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최루액의 혼합 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운용지침(2014. 4. 3.)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해설

- ① 틀림.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 ② 옳음.
- ③ 틀림. 위임명령은 성질상 법령을 보충하는 명령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며 위임범위 내에서 법규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형식의 규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집행명령은 상위법을 시행하기 위해 발해지는 명령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 ④ 틀림.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혼합살수방법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침에 혼합살수의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 역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5헌마476)

정답 ②

28.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②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 ③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
- ④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방식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해설

- ① 옳음.
- ② 옳음.
- ③ 틀림. 대리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된다.
- ④ 옳음.

정답 ③

29.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과 학자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순차적 특성을 갖는다.
- ㉡ Y이론적 인간형은 부지런하고, 책임과 자율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통제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동기유발 전략이 필요한 유형이다.
- ㉢ 인간의 개인적 성격과 성격의 성숙과정을 ‘미성숙에서 성숙으로’라고 보고,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을 최대의 성숙상태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 위생요인을 제거해주는 것은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 효과일 뿐이기 때문에, 근무태도 변화에 단기적 영향을 주어 사기는 높여줄 수 있으나 생산성을 높여주지는 못한다. 만족요인이 충족되면 자기실현욕구를 자극하여, 적극적 만족을 유발하고 동기유발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

- ① ㉠ 매슬로우(Maslow) ㉡ 맥그리거(McGregor) ㉢ 아지리스(Argyris) ㉣ 허즈버그(Herzberg)
- ② ㉠ 매슬로우(Maslow) ㉡ 아지리스(Argyris) ㉢ 맥그리거(McGregor) ㉣ 허즈버그(Herzberg)
- ③ ㉠ 매슬로우(Maslow) ㉡ 맥그리거(McGregor) ㉢ 허즈버그(Herzberg) ㉣ 아지리스(Argyris)
- ④ ㉠ 맥그리거(McGregor) ㉡ 아지리스(Argyris) ㉢ 허즈버그(Herzberg) ㉣ 매슬로우(Maslow)

해설

- ㉠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순차적 특성을 갖는다. - **매슬로우(Maslow)**
- ㉡ Y이론적 인간형은 부지런하고, 책임과 자율성 및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통제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동기유발 전략이 필요한 유형이다. - **맥그리거(McGregor)**
- ㉢ 인간의 개인적 성격과 성격의 성숙과정을 ‘미성숙에서 성숙으로’라고 보고,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을 최대의 성숙상태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아지리스(Argyris)**
- ㉣ 위생요인을 제거해주는 것은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 효과일 뿐이기 때문에, 근무태도 변화에 단기적 영향을 주어 사기는 높여줄 수 있으나 생산성을 높여주지는 못한다. 만족요인이 충족되면 자기실현욕구를 자극하여, 적극적 만족을 유발하고 동기유발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 - **허즈버그(Herzberg)**

▣ 동기부여의 내용이론(contents theory)과 과정이론(contents theory)

내용이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욕구 및 보상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떤 요인이 동기를 부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것으로 동기부여의 존재 또는 욕구이론이라고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 ·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two-factor theory) · 맥그리저(D. McGregor)의 X·Y이론 · 맥클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 아지리스(Chris 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
과정이론	동기부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가를 다룬 이론이며 과정이론들은 항상 유인, 강화 및 기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용어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이어한 변수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법 및 동기부여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룸(V.H. Vroom)의 기대이론 · 애덤스(J. Stacy. Adams)의 공정성이론

정답 ①

30. 경찰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현대에 이르러 조직발전의 기초로 작용하는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행정제도개선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 ② 전통적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생산성과 능률성에 중점을 두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인사행정의 표준화와 직무수행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 ③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평정자에 의한 집중화 엄격화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제2평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분배해야 한다.
- ④ 총경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하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만 평정한다.

해설

- ① 옳음.
- ② 옳음.
- ③ 틀림.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④)
- ④ 옳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①, ②제2호)

정답 ③

31.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찰공무원 甲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임용권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 포함 12명이 출석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 2명, 정직 1월 2명, 감봉 3월 1명, 감봉 2월 1명, 감봉 1월 3명, 견책 3명으로 의견이 나뉜 경우, 감봉 1월로 의결해야 한다.
- ③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OO경찰서 소속 경위 乙의 경감으로의 승진임용을 시·도지사가 하므로, 경위 乙에 대한 휴직이나 복직도 시·도지사가 한다.
- ④ 순경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 丙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원하는 유예기간을 적어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해야 한다.

해설

- ① 틀림.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찰공무원이 잘못되었다. ➡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④)
- ② 틀림.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라고 했으니 그에 따라 출제(위원장 포함한 5~7명)를 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출제 실수로 12명의 예를 들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었다.
- ③ 틀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 경감이하의 휴직, 복직의 임용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있다.
- ④ 틀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정답없음

32. 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 ㉥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 ① ㉠㉢㉣ ② ㉡㉢㉣ ③ ㉡㉢㉣ ④ ㉢㉣㉥

해설

㉡㉢㉣이 옳다.

- ㉠ 틀림.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제3조2)
- ㉡ 틀림.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같음**한다.
- ㉢ 틀림. 감사원은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을 하지만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제외**한다.

정답 ②

33.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112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 배치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②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112신고 이외 경찰관서별 일반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한다. 이때 접수한 자는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 ④ 112종합상황실 자료 중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하고,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한다.

해설

- ① 틀림.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112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배치하여야 한다.(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6조①)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6조②)
- ② 옳음.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10조②)
- ③ 옳음.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8조②)
- ④ 옳음.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①)

정답 ①

▣ 112 긴급신고 Code분류

	분류기준	출동목표시간
Code0	Code1 중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의 경우(선지령 및 제반출동요소 공조출동) 예)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갔다./ 여자가 비명을 지른 후 신고가 끊겼다.	최단시간내
Code1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임박, 진행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인 경우 예)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 주차된 차문을 열어보고 다닌다	최단시간내
Code2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집에 와보니 도둑이 들었는지 집이 난리다	긴급신고 지장없는 범위내 가급적 신속출동
Code3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예) 언제인지 모르지만 금반지가 없어졌다./ 며칠 전에 폭행을 당해 병원치료중이다.	방문조사 상담 / 당일 근무시간 내
Code4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 타 기관 연계	타기관 연계

3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 ㉢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3개가 옳음.

㉣ 틀림. 제1항제2호(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제3호(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4호 연장규정은 없음.

정답 ③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 ① 옳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①)
- ② 틀림.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①)
- ③ 옳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③, 제25조의4①②)
- ④ 옳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

정답 ②

3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의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한다.
-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 틀림.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제5호)
- ㉡ 틀림.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 ㉢ 틀림.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③제1호)
- ㉣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③제3호)
- ㉤ 옳음.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1조⑤)

정답 ②

37.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성폭력범죄 전담조사가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피해자 조사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남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자등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조사과정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해설

- ① 옳음.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②)
- ② 옳음.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①)
- ③ 옳음.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2조②)
- ④ 틀림.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8조 ⑤)

정답 ④

38. 행사안전경비에서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밀도의 희박화 - 제한된 면적의 특정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호간에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이 야기되므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사전에 혼잡상황을 대비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 ② 이동의 일정화 -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방향과 속도로 이동을 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③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시켜 질서 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질서를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심리상태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④ 지시의 철저 - 분명하고 자세한 안내방송을 계속함으로써 혼잡한 사태를 회피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해설

- ① 틀림. 경쟁적 사태의 해소에 대한 설명이다. ➡ 밀도의 희박화는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하고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군중정리의 원칙

밀도의 희박화	①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함. ②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 한다.
이동의 일정화	군중은 현재의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끼게 되므로 일정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경쟁적 사태의 해소	① 경쟁적 사태는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군중의 심리상태로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함. ②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 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임
지시의 철저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음

정답 ①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먼저 신고된 집회의 목적, 장소 및 시간, 참여 예정 인원, 집회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라도 관할 경찰관서장이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했다면,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된다.
- ②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 지역뿐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
- ③ 경찰관들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④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경우,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미신고집회'라는 사유로 자진 해산 요청을 한 후, '불법적인 행진시도',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위반'이라는 사유로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더라도 정당한 해산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 ① 틀림.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도13299)
- ② 옳음. 질서유지선의 설정에 관한 집시법 및 집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집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질서유지선이 위 범위를 벗어나 설정되었다면 이는 집시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도21311)
- ③ 옳음. (대법원 2016도21311)
- ④ 옳음. 해산명령을 하면서 '불법적인 행진시도',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또는 집시법 제12조 제2항 위반'을 해산사유로 고지하였는데, 불법적인 행진시도 또는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의 사유만으로 바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시위가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제한된 것으로서 집시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공소외인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고지한 위와 같은 사유들은 정당한 해산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6도1869)

정답 ①

40.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진단 3주)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경찰서까지 갔을 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다면, 비록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란에 ‘비틀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란에 ‘안면 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
- ②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는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 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함에 있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
-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진로변경금지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피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설

- ① 옳음. (대법원 2017도15519)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도7143)
- ② 옳음. (대법원 2013도15031)
- ③ 옳음.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8두42771)
- ④ 틀림.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피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정답 ④